

동북아 경제중심에 대한 금융적 지역주의 접근*

Monetary Regionalism and North-east Asian Economic Base

박석근**

목 차

제1장 서언

제2장 Balassa 경제통합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모형

제3장 금융적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제4장 한국경제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방안

제5장 결론

Key Words: Balassa 경제통합이론, CMI, AMF, AMS, AMU, 금융적 지역주의

Abstract

Balassian Approach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mainly aimed at improving conditions for regional trade since 1960s. After the financial crises of the late 1990s, however, the theoretical approach to regional integration will have to be a different one as regionalism have to offer enhanced protection against crises. The aim of this paper, above all, is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emerging new monetary regionalism. Regions that wish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monetary and financial affairs today have the option of monetary regionalism without trade agreement. East Asian region will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domain within which to explore enhanced protection against financial crises. And as Korea seems to play a crucial role in building regional integration among ASEAN+3(Korea, China and Japan) countries, alternative policy for Korean economy to be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Base need to be schemed on the basis of Balassian as well as monetary regionalism.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21산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제1장 서언

본 연구는 금융적 지역주의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신지역주의는 그 역사적 성격과 지역적 유형화에 있어서 과거의 지역주의와 대비되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성은 지역적 금융협력을 매개로 하여 지역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무역부문에서의 지역적 협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내 금융협력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무역부문이 아니라 금융부문이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monetary regionalism) 경향은 과거 유럽에서의 지역주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기존의 통합이론에 의한 설명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주의의 성격과 전개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경제통합의 이론구조와는 차별적인 금융적 지역주의의 분석틀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통합이론을 제시한 Bela Balassa(1961)의 단계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후 금융적 지역주의의 단계적 발전과정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소개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최근까지 제시된 다양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에 내재된 단계론적 성격에 대한 평가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당위론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엄밀한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경제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고 있다. 우선 2장에서는 Balassa의 전통적인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금융적 지역주의의 단계론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최근까지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제견해를 금융적 지역주의의 단계론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를 기초로 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한 다음 5장에서는 요약과 마무리를 하는 순서를 취한다.

제2장 Balassa 경제통합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모형

본장에서는 금융적 지역주의의 경제통합 단계론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경제가 무역의 흐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Bela Balassa(1961)의

경제통합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확인한다. 뒤이어 Dieter(2000)와 Dieter & Higgott(2002)의 금융적 지역주의 단계론을 비유럽적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5단계론으로 재구성한다.

1. Balassa의 경제통합이론의 한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은 1960년대 이래 Balassa(1961)의 방법론과 단계론적 분석틀(Balassian approach)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Balassa에 의하면 지역경제통합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된다.

- (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2) 관세동맹(customs union)
- (3) 공동시장(commom market)
-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 (5) 정치경제적 통합(economic and political union)

Balassa의 이상과 같은 경제통합단계의 유형화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통합의 분석에 널리 적용되어 왔으나, 이미 40여 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주의의 흐름(new regionalism)을 수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1960년대에는 관세가 가장 유효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오늘날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국가간 금융적 흐름이 개별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훨씬 낮은 상태에 있었다. 이것은 고정환율제가 일반화되어 있던 당시의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대규모의 자본이동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동요를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직접적인 자본통제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따라서 당시에는 다수국가들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무역을 통한 경제통합 자체가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국가들은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을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세계경제로부터 자국 경제를 격리하거나 보호하는 차단막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경제 운영원리는 1960년대에 형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왔으며 그 가운데에는 질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 Balassa의 분석틀에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WTO 체제가 수립된 이래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관세의 의의는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반해 비관세 무역장벽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국가간 경제교류가 실물중심의 무역거래 중심에서 자본이동을 포함한 금융적 거래의 비중이 증대하는 새로운 추세로 급변하고 있

음을 감안할 때, Balassa의 경제통합의 단계적 유형화는 크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민경제가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는 입장과 전략은 Balassa의 이론이 제시하는 범주를 넘어 금융부문이나 금융정책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경제통합의 단계적 유형화의 이론과 정책에 의하여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79년 결성된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국가간 금융적 협력이 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비록 유럽이 이를 유럽경제통합에 있어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내 금융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강화를 추구해온 유럽의 경험과 사례는 Balassa의 분석틀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기존의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체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적 지역주의의 경향을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의 지역경제의 통합이론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표 1> 무역주도 경제통합의 단계와 주요내용

단계	주요내용	문제점
자유무역지대 (FTA)	역내 자유무역 역외 독자적인 관세부과	원산지 확인의 필요성
관세동맹 (Custom Union)	역외 공동관세	역외공동관세정책의 수립필요성
공동시장 (Common Market)	상품무역자유화 및 노동과 자본의 자유이동	이질적 경제 간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정책 추구
경제동맹 (Economic Union)	공동경제정책 추구	역내 고정환율(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개별경제 간의 대응능력 차이)
정치적 통합 (Political Union)	초국적 정치경제기구 창설	초국적 기구에 의한 개별국의 주권 침해

자료: Dieter(2000, p.8) 필자 수정정리

2. 금융적 지역주의의 경제통합 단계론

1) 금융적 지역주의의 의미

금융적 지역주의(monetary regionalism)는 국가간의 무역연계와는 별도로 역내에서의

통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적인 지역주의와 같이 금융적 지역주의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회원국이 향유하고 있던 일국의 경제적 주권이나 경제적 독립성과 같은 핵심적 요소에 해당되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일국의 독자적인 통화발행의 권한을 제한하고 역내공동통화를 창출하는 형태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금융적 통합의 과정을 Dieter(2000)와 Dieter & Higgott(2002)는 4단계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Dieter 등이 금융적 지역주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4단계는 일차적으로 외환위기의 방지 및 관리 메커니즘과 역내환율관리정책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적 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통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조치와 그 이익을 지역주의 참여국에게 확산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합의 심화와 참여국의 통화주권의 포기정도에 따라 단계를 설정할 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¹⁾.

- 가. 제1단계 지역통화스왑협정(regional monetary swap agreement)
- 나. 제2단계 지역유동성기금(regional liquidity fund)
- 다. 제3단계 지역통화제도(regional monetary system)
- 라. 제4단계 지역화폐동맹(regional monetary union)
- 마. 제5단계 완전한 정치·경제적 통합(complete regional integration)

1)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형은 Dieter(2000)과 Dieter & Higgott(2002)에 의한 i) regional liquidity fund, ii) regional monetary system, iii) economic & monetary union, iv) political union의 4 단계 모형을 원용하였다. 그러나 Dieter와 Dieter & Higgott가 제시한 모형과의 차이점은 금융적 지역주의의 제1단계에 지역통화스왑협정의 단계를 설정하여 역내 국가간 쌍무적 스왑협정 체결에 의한 유동성지원 네트워크체제의 형성을 지역금융협력의 출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Dieter와 Dieter & Higgott가 지역통화스왑협정을 금융적 지역주의의 제1단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이것이 빠져 있었고 유럽의 경험에 비중을 두면서 그들의 단계론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통합의 보편논리를 구성하는데 유럽의 개별성에 기초한 특수논리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본 연구 3장 4절 참조). 특히 역사적용 볼 때 1990년대 이후의 신지역주의적 통합의 논리와 운동은 무역주도의 통합이든 금융적 통합이든 새로운 통합의 단계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통합 움직임 속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의 통합은 유럽의 공식적 제도화의 전례를 기계적으로 답습해야 하는가 하는 규범론적 질문에 대해서도 회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때 금융적 지역주의의 단계설정에 현재 동아시아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역통화스왑협정의 의의는 크게 평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외환금융위기를 경험한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화스왑협정은 이미 기능적으로도 지역금융협력의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론과 이를 토대로 차후의 금융적 통합뿐만 아니라 무역부문에서의 통합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5 단계론은 일정한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금융적 지역주의의 제단계

가. 제1단계 지역통화스왑협정(regional monetary swap agreement)

통화스왑협정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의 협의에 따라 양자간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여러 당사국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유동성지원장치를 구축하여 지역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국가간 협력의 차원을 떠나 역내 금융적 지역주의의 첫 단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지역통화스왑을 통해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보이는 국가에 대하여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초보적인 장치를 확보하여 지역 차원에서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대처가 기본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통화스왑협정에 있어서는 자금공여국과 자금수혜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있고 대상통화와 약정규모가 결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통화스왑협정은 자금공여국의 협조 하에서 단기적인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목적으로 체결된다. 통상 자금지원은 기본적으로 IMF로부터의 자금지원이 확정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약정금액의 일정비율(통상 10%)까지는 IMF 자금지원과 연계하지 않고 자금공여국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화스왑협정은 IMF의 자금지원에 대한 부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통화스왑협정은 역내 금융협력의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돌발적인 외환금융위기를 맞게 되는 국가의 신속한 유동성확보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IMF자금지원과의 연계로 인하여 통화스왑협정의 성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비연계부분은 향후의 협정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효과적인 유동성지원장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화스왑협정은 금융적 지역주의로서 많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이 협정이 지역내 금융협력의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양국간의 협정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적 지역주의에 기초한 역내 금융협력의 기본방향이 유동성지원장치를 확보하는 데에서 나아가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환율조정메커니즘을 갖추는데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제2단계 지역유동성기금(regional liquidity fund)

역내 국가들은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초보적인 형태의 금융적 지역주의로 이행하게 되며 이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역내 공적인 지역유동성기금을 창설하는 것이다.²⁾ 따라서 이 조치는 금융위기에 대한 역내 안전망

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국들은 역내 유동성풀(liquidity pool)에 자국 대외보유고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내게된다. 이 제도 하에서 일국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대외준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기금에 모여 있는 유동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외환위기 시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유동성기금은 스왑협정(swap agreement)을 포함하여 일국의 통화당국이 필요시 자국통화를 외환과 스와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한다. 참여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준비의 일정비율은 역내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금의 의도는 참여국의 개별적 이익과 배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참여국 간의 적절한 이해와 양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적 지역주의의 첫 번째 단계로서 대외준비의 일정비율은 10~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여국의 신중한 지역유동성기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소 높은 금리를 부과하며 사용기간도 장기는 고려하지 않고 단기로 제한하여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지역유동성기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참여국의 중앙은행은 국내신용위기에 직면하여 국내민간부문에 대한 '최후의 대부자(a 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제금융시장에 크게 의존하거나 외화차관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일국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크게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유동성기금은 일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크게 활성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부분적인 자본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Sussangkarn, 2000).³⁾

둘째, 참여국의 중앙은행은 역내 유동성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대외준비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외준비외화는 유동성이 매우 높으며 극도로 적은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대외준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적 지역주의 그룹의 참여국이 이 자본을 생산적인 실물부문에 투자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외준비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수익률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⁴⁾.

2) 지역유동성기금(regional liquidity fund)는 현재 아랍통화기금(Arab Monetary Fund)와 남미준비기금(The Latin Americal Reserve Fund)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는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에 의해 1976년 설립되었으며, 후자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및 베네주엘라의 5개국에 의해 1991년에 설립되었다.

3) 이것은 지역유동성기금이 유동성문제(problems of liquidity)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문제(problems of solvency)에 이르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Sussangkarn, 2000, p.20).

4) 이를 테면 일국의 년 자본수익률이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100억 달

셋째, 한 지역이 독자적인 유동성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참여국의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참여국 공동으로 지역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감독체제(joint regional surveillance of financial markets)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Dieter, 2000, p.12).

넷째, 뿐만 아니라 지역유동성기금이 출범함으로써 역내국들은 IMF에 대한 의존경향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입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Dieter, 2000, p.12).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유동성기금은 주요 목적을 참여국의 환율안정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금은 외화로 표시된 부채에 대한 지불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상환에 필요한 외화자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참여국의 금융기관과 제 경제주체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긴급히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금은 금융위기의 관리라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IMF와 기능적으로 중복된다. 적어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역유동성기금의 참여국은 IMF와 우선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을 유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제3단계 지역통화제도(regional monetary system)

지역통화협력은 외환위기에 대비한 유동성의 지원뿐만 아니라 역내의 환율안정장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완전한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거나 공동통화를 창출할 수 있으나 그 중간단계로서 지역통화제도는 회원국들의 환율변동폭을 제한하여 참여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역통화제도의 문제점은 적정환율을 결정하고 환율의 변동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데 있다. 즉 변동폭(band)이 너무 넓으면 환율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얻는 실물경제 상의 이익이 제한되며, 환율변동 폭이 너무 좁으면 리스크가 커져 이 지역통화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역내환율의 안정과 국제통화불안으로부터 역내경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를 결성하여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 운영이전에 채택된 스네이크제도(snake system)이라 불리는 유럽공동변동환율제도가 실패하였고 EMS도 1992년 부분적으로 붕괴된 것을 감안하면 지역통화제도는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⁵⁾

러의 대외준비는 당해국에 10억 달러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역유동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반대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5) 브레튼우즈제의 붕괴로 인해 유럽이 대처방안으로 채택한 스네이크제도는 역내통화간의 환율변동폭을 $\pm 1.125\%$ 로 제한하고, 역외통화에 대해서는 변동환율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제

지역통화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지역간 비교 및 시기적 비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국 통화당국간 협력관계가 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간 협조와 활발한 정보교환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통화위원회의 정례적인 개최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지역유동성기금이 확산되어 있더라도 외환위기의 방지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장치의 운영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의 시행은 지역통화제도의 단계에서 가능해진다.⁶⁾

지역통화제도의 단계에서는 역내 무역자유화가 확대되어 FTA 혹은 관세동맹의 단계로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 통화협력이 강화되면 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제도가 정비되고 이에 따른 교역의 확대가 이뤄지는데 통합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자유화와 금융부문의 자유화의 수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통화제도의 단계에서 통합을 보다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지역통화동맹의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역내 국가간 재정금융정책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⁷⁾

라. 제4단계 지역통화동맹(regional monetary union)

지역통화동맹은 지역통화제도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내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통화 혹은 완전한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통화를 유통시키면서 단일한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강력한 통화협력체를 말한다. 따라서 통화동맹에 있어서는 역내 통화간 완전한 교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화협력의 조직이 가동되며 가맹국 통화간 환율변동폭은 철폐되어 통화간 평가를 절대적으로 고정시킨다(손병해, 2002, p.144). 이러한 점에서 지역통화동맹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도의 운영실패는 1979년 3월 EMS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 6) 유럽의 경우 1986년 유럽단일화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에 의해 시장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화통합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으나 시장통합의 지속적인 노력이 EMS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즉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투기적 자본의 이동이 완전자유화될 경우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환율의 변동을 허용하는 EMS의 붕괴가 예상되고, 역내 교역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통화를 창출함으로써 역내 환율변동과 평가조정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장통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제통화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의 3단계 EMU 추진계획으로 제시되었다.
- 7) 비록 유럽의 경험이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Euro Zone의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주어진 유럽국가 거시경제정책의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① GDP 60% 이하의 공공부채, ② GDP 3% 이하의 신규공공부채, ③ 최소 인플레이션 국가보다 1.5% 상회하지 않는 물가상승율, ④ 최우량 3개국보다 2% 상회하지 않는 장기 이자율, ⑤ 지난 2년간 성공적인 EMS 참여 실적 등.

같은 요소가 전제된다(Allen, 1976).

- i) 단일한 통화 혹은 고정환율에 의해 완전한 교환성을 갖는 복수의 통화
- ii) 개별국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맹지역 전체차원에서 결정되는 통화정책
- iii) 단일한 역외 환율정책

<표 2> 기존의 지역통화동맹

	설립연도	공동통화	환율제도	가맹국
WAEMU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	1994년	CFA franc	euro화에 페그(1998년까지 는 프랑스 franc에 페그)	Benin, Burkina Faso, Cote d'Ivoire, Mali, Niger, Senegal, Togo 등 7개국
CAEMC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1994년(1964 년 창설된 중부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 이 해체되면서 대체됨)	CFA franc	euro화에 페그(1998년까지 는 프랑스 franc에 페그)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차드, 적도기네 등 6개국
CMA (공동통화지역)	1986년	rand를 공동이용 (각국통화 존속)	rand에 페그 (rand는 자유변동)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레소토, 나미비아 등 4개국
ECCU (동카리브해 통화동맹)	1981년 동카리브해 국가기구 창설 1983년 동카리브해 중앙은행 설립	Eastern Caribbean dollar	미국 dollar화에 페그	Aguilla, Antigua and Barbuda, Dominica, Grenad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Grenadines 등 카리브해의 8개 소국
EMU (유럽통화동맹)	1999년	euro	자유변동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EU 소속 12개국

WEMU: West Africa Economic and Monetary Union
 CAEMC: Central Africa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CMA: Common Monetary Area, rand zone
 ECCU: Eastern Caribbean Currency Union
 EMU: European Monetary Union

이러한 점에서 지역통화동맹은 금융적 지역주의의 완전한 통합으로 이행하는 직전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통화동맹의 경우도 공동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또한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외환준비의 풀(pool)제와 일원적 중앙은행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일원적 중앙은행제와 완전한 단일통화까지 도입하는 경우의 두 가지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Corden(1972)은 전자를 유사환율동맹 후자를 완전한

환율동맹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공동 지역통화 정책과 유로화에 의한 단일 통화에 기초한 EMU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⁸⁾.

<표 2>에 정리되어 있는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지역통화동맹은 강력한 지역금융협력의 한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편익을 지역 내에 가져다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공동통화를 도입함으로써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역내외환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역내에 공동통화를 도입하게 되면 역내 환율변동은 원천적으로 소멸되어 역내국가간 통화의 교환이 불필요하게 되어 외환거래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실질환율의 불확실성 또한 크게 감소하여 투자와 소비 및 무역과 자본거래를 포함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통합과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공동통화의 도입으로 외환준비 소요규모가 축소된다. 역내거래에 외환이 불필요해지고 외환준비의 풀제가 도입되면 적자국의 외화부족분을 흑자국의 보유외환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므로 지역통화동맹 전체의 적정외환준비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셋째, 공동통화 발행의 화폐발행 차익(seigniorage)이 증대할 수 있다. 공동통화에 대한 역내외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국제적인 거래 및 결제수단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국제준비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공동통화의 발행차익이 증대하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고 차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상과 같은 효과를 통해 지역통화동맹은 세계경제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통화동맹은 금융적 통합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개별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독립성을 크게 상실시키는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즉 통화동맹이 결성되면 EMU의 운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개별국가의 통화와 환율정책은 공동체의 통합기구에 이양된다. 또한 회원국 내부의 재정정책의 독립성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음으로써 개별국이 독자적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펼칠 수 있는 정책시행의 자율성이 축소된다⁹⁾.

한편 지역통화동맹의 단계에서는 수입국에 대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기 때문에 회원국이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FTA의 단계를 넘어 관세동맹(custom union) 이상의 역내무역자유화의 단계가 요구된다. 역내공동화폐가 창출되고 공동중앙은행에 의한 통일된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금융통합과 통화통합은 경제통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경제발전 수준이 현격히 다른 국가간에 노동이

8) 외환위기 이후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통화동맹의 구상 또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완전한 환율동맹의 형태에 접근하고 있다. 이하 다음 장 4절 참조.

9) 통화동맹의 특정 회원국이 외부 충격으로 균형에서 이탈하였을 경우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가져다 주는 대내균형과 국제수지 균형의 대외균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더 커질 수 있고 새로운 균형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한 경제통합의 단계로 연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제5단계 완전한 정치·경제적 통합(complete regional integration)

이전의 단계와 완전한 경제통합과의 차이점은 일국적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완전한 경제통합의 단계에서는 역내 국가의 합의에 의해 초국가기구가 구성되어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임하고 일국적 정책추구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금융적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유동성공급과 환율결정 등에 관련된 경제적 통합은 이미 지역통화동맹의 단계에서 대부분 이뤄진다. 완전한 경제통합의 단계에서는 금리수준과 관련된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의 정책조화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초국가기구에 위임하는 한편 개별국의 입장에서는 하위정책의 부문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금융적 지역주의의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표 3> 금융적 지역주의의 단계와 주요내용

	제1단계 지역통화스왑협정	제2단계 지역유동성기금	제3단계 지역통화제도	제4단계 지역통화동맹	제5단계 완전한 경제통합
주요내용	역내 외환위기가 국가에 유동성공급 통화스왑협정 체결	공적인 지역유동성 기금 창출	환율변동폭 갖는 지역공동환율제 도입	지역 단일화폐 창 출, 항구적인 역 내고정환율제 도입	정치경제적 통합 달성(대부분의 사안 일국 정치체제 독 자 관장함)
주요정책 수단	통화스왑협정에 의 한 단기유동성지원	역내 지역통화위원 회 위한 포럼구성	지역금융위원회 의 정례적인 개최	지역중앙은행 설립	초국가기구 창출
위기관리	지역통화스왑 네트 워크 공동관리	공적 및 민간유동 성기금의 운용			
위기에방	모니터링 및 금융 시장 감독체제 미 비	외화표시 여신의 해징 강화 자본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유지	강제적인 해징 규모 점진적인 감축	자본이동에 대한 국가통제 폐지	
무역관련 조치	FTA 이전 단계에 서도 추진가능	FTA 이전 단계에서 도 추진가능	지역무역 자유화 의 급진전(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이후 의 단계
거시경제 정책	거시경제정책 조화 미비	재정금융정책에 대 한 공동감시 및 금 용시장에 대한 지 역차원에서의 감독	화폐정책에 대한 조정과 조화 (부채관리 금리 정책)	지역중앙은행에 의 한 공동관리	초국가기구에 의한 거시경제정책 관리

자료: Dieter & Higgott(2002, p.14)를 기초로 필자 수정.

제3장 금융적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은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의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흐름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부가되면서 소위 방어적 지역주의(defensive regionalism), 혹은 금융적 지역주의(monetary regionalism) 등의 차원에서 지역주의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적 지역주의가 어떤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이를 전장에서의 검토한 금융적 지역주의의 제 단계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논의수준의 현황과 전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통화스왑협정: CMI(Chiang Mai Initiative)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통화 및 금융협력에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1997년 9월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창설을 제안하고 1998년 10월 신미야자와구상(NMI: New Miyazawa Initiative) 발표하는 형태로 촉발되었다¹⁰⁾. 그러나 그것이 일차적인 실효를 거둔 것은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역통화스왑협정인 CMI(Chiang Mai Initiative)를 채택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CMI는 협정에서 체결한 범위 내에서 외환위기에 직면하였거나 유동성부족 문제에 직면한 역내 국가에 대하여 달러화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유동성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CMI는 쌍무적 통화스왑협정에 기초하고 있지만 ASEAN+3국간의 다자적 통화스왑협정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 금융협력체제가 형성되는 시발점이자 계기로 평가된다.

둘째, 다자적 통화스왑협정은 기존 ASEAN 국가간의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하고 한·중·일 3국과 ASEAN 중앙은행간에 스왑 및 환매조건부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형태를 취한다.

셋째, CMI는 국가간 총계약액의 10%까지는 양국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지원이 가

10)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97년 9월 일본의 AMF제안은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IMF 등이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유는 AMF가 창설될 경우 국제금융체제에 혼란이 발생하고 외환위기국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것이었다.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능하게끔 하고 있으나, 10%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수혜국이 IMF의 거시경제구조조정정책 프로그램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IMF의 긴급금융 지원체제의 성격과 기능에 보완적인 하위프로그램으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표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CMI는 2003년 3월 현재 총 15건 31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CMI의 운영과 더불어 역내 경제동향 점검과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개발과 활용을 위한 역내 정책협의체제 등도 ASEAN+3국 협의체 내부에서 논의되고 구축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통화스왑협정이 구체화되고 금융적 지역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CMI의 형태로 진행 중인 동아시아 금융적 지역주의의 외환위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일정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I는 금융적 지역주의의 제1단계인 지역통화스왑협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환율협력과 통화통합 등을 통한 금융협력에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주요 해결과제와 한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표 4> CMI에 의한 쌍무적 통화스왑 계약1)

	한국	일본	중국
한국	-	2001.07.04 20억 달러 일본 지원	2002.06.24 20억 달러 상호지원
일본	2001.07.04 20억 달러 일본 지원	-	2002.03.28 30억 달러 상호지원
중국	2002.06.24 20억 달러 상호지원	2002.03.28 30억 달러 상호지원	-
태국	2002.06.25 10억 달러 상호지원	2001.07.28 30억 달러 일본 지원	2002.10.09 20억 달러 중국 지원
말레이시아	2002.07.26 10억 달러 상호지원	2001.10.05 30억 달러 일본 지원	협의 중
필리핀	2002.08.09 10억 달러 상호지원	2002.08.30 30억 달러 일본 지원	-
인도네시아	-	2003.02.17 30억 달러 일본 지원	-

1) 2003년 3월 말 현재 계약체결 완료일과 계약규모 및 지원국가를 제시하고 있음.
자료: 전승철(2003)

첫째, 실효성에 대한 과제이다. 기본적으로 CMI의 통화스왑 네트워크는 쌍무적인 협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국이 외환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자금지원국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지원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규모나 지원조건 등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이 불가능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CMI는 실행가능성과 신속성 및 추진력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CMI에서 지원가능한 최대금융지원규모는 실제 외환위기에 유효하게 대응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¹⁾.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과제이다. CMI는 지역통화스왑 네트워크의 성격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책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와 기구를 확보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지역 금융통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내 각국의 금융환경과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융시장 감독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와 제도화된 협력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의 CMI는 역내 금융협력의 초보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표기구나 초국가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식적 기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2. 지역유동성기금: AMF(Asian Monetary Fund)

전술한 지역통화스왑협정의 실효성을 한 차원 높이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금융적 지역주의의 방안은 지역유동성기금을 창설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AMF)이란 형태로 이를 창설하고 하였고 이후 미국과 IMF의 반대에 의해 현재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그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 FTA가 확산되거나 물류망의 형성으로 단일화된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금융통화적 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여건이 형성될 경우 AMF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AMF 구상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응하였던 IMF의 과도한 경제개혁 요구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새로이 위기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아시아에 독자적인 유동성 지원장치가 개발되고 동아시아 여건에 맞는 경제진단과 경제개혁 자문기구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자

11) 전술할 바와 같이 CMI의 총계약규모는 2003년 3월 현재 310억 달러에 머물고 있으나 박영철(1999)은 동아시아가 새로운 외환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억 달러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AMF가 구상하고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지역유동성기금으로서의 역할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IMF의 기능과 역할을 동아시아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이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시에 미국과 같은 역외국가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간섭을 피함으로써 독자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IMF가 방대한 조직에 의해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비해 AMF는 회원국 위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에 유동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지역금융에 대한 감독과 감시기능의 역할이다. 동아시아에서는 AMF를 통해 CMI에서 확보하지 못한 기구를 통하여 역내경제의 새로운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금융시장 모니터링 등 금융감시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역내 경제간 상호의존성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정책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CMI 통화스왑협정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외환준비금을 조성하여 유사시 충분한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기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사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개발 권고함으로써 IMF 지원의 경우 발생하였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수혜국의 경제회복과 위기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AMF의 출범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IMF와의 역할분담 문제이다. 이것은 이 기구가 동아시아에서 IMF와 중복되는 유동성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IMF의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반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MF는 지역내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장시간이 소요되고 구조조정문제가 수반되는 국가적 지급불능 (insolvency)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IMF가 맡는 역할배분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Vichyanond, 2001).¹²⁾

또한 AMF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도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일본은 AMF 구상단계에서 적극성을 보였으나 국내 경제개혁에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또한 역내 전체이익보다는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Lewis, 1999)¹³⁾. 또한 중국 역시 최근의 급성장에도

12) 이러한 제안은 유동성부족 문제와 지급불능문제의 기준설정에 관한 문제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역할축소 문제로 우려하는 IMF와 미국의 입장을 여전히 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13) 일본은 신미야자와구상(NMI)을 통해 300억 달러를 아시아국가에 제시하면서도 그 자금을 일본제품과 서비스구매에 연계시킴으로써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Lewis, 1999).

불구하고 아직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저차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아직 무리라고 평가되고 있다(Narine, 2000).

이러한 점에서 AMF의 논의는 그 출범의 경제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내외부의 경제외적인 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3. 지역통화제도: AMS(Asian Monetary System)

동아시아 지역에서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금융협력에서 한 차원 높여 역내 국가간 환율협력의 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협력은 역내 국가간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유동성의 공급, 기준환율의 결정, 환율변동 폭과 외환시장 개입 등을 포함하는 역내환율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다른 정책목표에 비해 우선한다는 동감대를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역내국가들은 일차적으로는 공동의 환율정책을 추구하는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를 채택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새로운 공동통화를 창출하는 통화통합의 방안으로서 지역통화제도를 구상할 수 있다.

먼저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를 검토한다. 현재와 같이 미국 달러화에 편중된 환율체제가 자국의 기초경제여건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변동하여 경제의 불안요인을 가중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미 달러화나 유로 등 어느 기축통화에 연동시키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단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미 달러화나, 유로 및 엔 등의 기축통화나 자국 통화들로 구성된 공동통화바스켓을 구성하고 자국 통화 가치를 이 바스켓에 페그시키는 제도이다¹⁴⁾. 혹은 각국이 자국의 무역거래 비중에 의해 구성된 바스켓에 자국통화를 페그시키는 방안도 있으나 이 경우는 국가간 실효환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바스켓에 포함되는 통화의 선정과 가중치 설정이다. 이와 관련 동아시아 지역의 여건으로는 달러와 엔, 유로 등으로 구성되는 바스켓이 현실적이고 페그제의 유연성을 위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한 변동폭

14) EMS와 같이 역내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에 페그시키는 방법, 역내 최대교역 비중을 갖는 일본의 엔에 최적가중치를 부여하는 바스켓에 페그시키는 방법, 역외 통화인 달러와 유로화 등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한 바스켓에 페그시키는 방법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안과 둘째 안에는 교역비중이 큰 미국과 유럽의 통화가 배제된다는 문제와 일본의 상당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둘째 안은 일본과의 교역가중치가 역내국가간 다를 것이므로 역내환율의 안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안은 공동바스켓(common basket) 구성방법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참여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경우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을 허용하는 제도(crawling system)를 구상할 수도 있다(조종화·김우진, 2001).

이 제도는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도 역내 환율과 역외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회원국간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동성 지원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외환위기 발생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에서 역내 금융협력을 한 차원 더 높여 역외 공동통화를 창출하는 환율협력체제가 지역통화제도안이다¹⁵⁾. 따라서 아시아통화제도(AMS)의 운영은 두 과정으로 이뤄진다. 일차적으로는 공동통화의 창출로서 역내통화로만 이뤄지는 공동통화바스켓을 구성한 뒤 이를 대표하는 아시아통화단위(Asia Currency Unit)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음 이차적으로는 환율변동에 대한 지역협력으로서 대외적으로 아시아공동통화의 환율은 자유변동에 맡기지만 역내에 있어 각국통화의 환율은 공동통화의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 폭의 밴드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제한하는 것이다(Hefeker & Nabor, 2002).

아시아통화제도는 현재 학술적인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의 여건이 성숙되는 정도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AMS가 실현될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통화협력체로서 기능을 하며 지역의 외환시장 안정과 무역 및 투자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내 경제발전과 경제통합의 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 유럽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통화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주도국가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EMS의 경우에는 독일이 주변국들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통합에 앞장섰는데,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도국의 역할을 기대할 만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AMS가 창출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거 독일 연방은행의 경우처럼 일본이나 중국의 중앙은행이 위기 시 무제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안정을 추구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전승철, 2003).

15) 아시아통화제도의 안은 1979년 창설된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갖는다. 유럽은 이후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MU와 단일통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70년 발표된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였다. 유럽통화제도의 효시는 1949년 결성된 EPU(European Payment Union)이었다. EPU는 1958년 보다 포괄적인 업무를 맡는 EMA(European Monetary Agreement)로 대체되었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EMU(Economic & Monetary Union)으로 발전하며 1968년 관세동맹의 단계로 이행하는 계기를 맞는다. 이때 통화통합을 우선시하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와 실물통합을 우선시하는 독일, 네덜란드 등의 견해가 충돌하는데 이 대립을 조정하고 유럽통합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보고서가 베르너 보고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ASEAN과 한·중·이 3개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의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4. 지역통화동맹: AMU(Asian Monetary Union)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통화동맹의 실현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것은 1999년 출범한 EMU의 성공적인 운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화동맹은 이미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통화의 창출 및 역외 단일환율제 유지, 자본시장 통합 및 통일된 통화정책 실시, 외환보유외의 풀제 실시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통화동맹이 시행된다면 AMU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Fabella, 2002).

- i) 역내 유일한 통화정책당국으로서 아시아중앙은행(Asian Central Bank)을 설립한다.
- ii) 역내 공동통화를 도입하여 일정 폭의 밴드 내에서 미 달러화에 페그시키고 여타 주요통화에 대해서는 자유변동을 허용한다.
- iii) CMI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가맹국간 통화스왑계약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부족을 겪는 가맹국에 한시적인 자금지원을 하거나 미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활용한다.
- iv) 역내 초국가적인 통화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거시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정책대응방안을 권고한다.
- v) 역내 자본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하되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취하는 관세동맹을 체결한다.

이미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통화동맹의 단계에서는 역내 통일된 금융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조화가 되는 무역자유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관세동맹(custom union)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여건상 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력의 완전한 역내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동아시아 통화동맹(AMU)의 추진은 장기적인 의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¹⁶⁾ 그러나 AMU는 동아시아 금융적 지역주의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되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제반 여건은 AMU에 대해서는 미성숙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통합의 경험이 일천하고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

16) 이에 대해서는 Hooper(2002), Madhur(2002), Mundell(2001), 문우석(200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통합의 노력은 최근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낮은 단계의 지역유동성기금(ALF) 혹은 지역통화제도(AMS) 등의 과정에서 금융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유럽의 자체적인 성과가 EMU로 얻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데 AMU 운영의 최대과제인 동아시아 중앙은행과 같은 집행력을 갖춘 초국가적 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한 협조와 상당한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는 준비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술한 지역통화제도와 지역통화동맹에서도 지적한 과제였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협력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한 현실은 AMU의 장기적인 실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EMU 형성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운영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은 이미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적인 원인과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있는 점은 향후 동아시아 금융적 지역주의의 진로에 중요한 해결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서 동아시아 지역에는 국가간, 민족간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는 유럽보다는 훨씬 다양한 종교와 인종 및 언어의 이질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위에 국가간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다양성 및 경제발전단계의 격차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이 과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여 금융적 지역주의의 마지막 단계로까지 통합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유럽의 경험과는 차별적인 독자적인 통합의 길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¹⁷⁾ 즉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17) EU통합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을 전제로 EU와 여타 지역주의적 논의의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상대주의적 접근의 관점에서 있는 비교지역주의적 접근에 있어서는 EU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이하의 내용은 박석근(2003b) 참조). 첫째, EU에 국한된 EU통합논의는 1990년대 이후 유럽전체를 규정해온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질서의 조정과정을 고려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Wallace, 2000). 이러한 시각은 EU가 복잡한 경제적 공치체제(a system of economic governance)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EU 통합자체가 현대세계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의 부분적인 과정이며 역으로 글로벌화에도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글로벌화와 지역주의적 움직임 상호관계를 고려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EU 통합은 지역주의의 극단적인 모범적인 사례(the paradigmatic case of regionalism)라는 점에서, 여타의 지역주의 논의의 방향설정에 대하여 왜곡된 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EU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예 APEC)를 비교할 경우 항상 강조되는 점은 왜 APEC은 EU와 다른가 하는 점이지 EU가 APEC과 다른 점에 대한 논의는 강조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의 지역주의 연구풍토가 지역통합의 공식적인 제도화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있는 통합의 논리와 금융협력의 양상은 과거 유럽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따라서 EMU 추진 과정에서의 조건과 결성의 논리를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Wyplosz, 2001). 이러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경우는 무역주도의 국가간 통합이 선행된 다음에 금융협력이 뒤따랐으나, 동아시아의 경우는 무역주도의 협력보다 통화협력이 선도하는 금융적 지역주의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럽의 경우는 역내 환율의 안정성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나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역내 및 역외 환율의 안정성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유럽의 경우는 환율제도의 정착과 자본자유화가 도시에 진행되어 초기에는 유연한 페그제의 도입이 가능하였으나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환율제도의 도입 이전에 자본자유화가 이미 선행되었기 때문에 유연한 페그제의 도입은 어렵게 되었다.

넷째, 유럽과 같은 통합의 경험과 공식적인 제도화의 경험이 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역과 금융 양측면에서 초국적 기구의 결성을 이루기보다는 쌍무적인 협상을 통한 느슨한 협력체를 선호하는 형태로 지역주의가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지역론적 관점에서의 지적은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의 방향이 EU를 포함한 여타 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기존의 성과와는 차별적인 독자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한국경제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방안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인 조건과 논리 속에서 이미 시작하였다. 공식적 제도화에 대한 선호가 약하고 다자적 협력에 대한 경험이 없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유럽의 전철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지역협력의 직접적인

다. EU의 경험에 비추어 성숙한 지역주의의 단계에 접어들면 초국가적 기구가 자동적으로 창출될 것이라는 견해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지역의 초국가적 기구에 기초하여 형성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셋째, EU는 이미 고도로 통합된 정치체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Hix, 1998). 이 견해는 실제로 'EU를 지역통합과 지역주의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는가'하는 과제에 대한 논쟁에서 극단적인 입장에서 있는데, 이러한 논지의 근거로서 Hix는 EU 내부의 대부분의 이해 당사자들은 통합과제의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이익의 충족을 지향하면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이미 독자적인 정치체제로 형성되었고 따라서 여타의 지역통합기구와는 성격이 다른 관료체제로 전화하고 있다는 Hix의 평가는 비교지역주의와 지역통합의 과제해결을 위해 EU를 연구하는 유용성에 대해서 일정한 문제점이 있음을 고려하게 한다.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지역적 무역협력의 단계를 선행하지 않고 바로 지역적 금융협력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타 지역에서의 금융협력은 지역통화제도 혹은 지역통화동맹 등의 공식적인 제도화를 선호하였다는 점과는 달리 제도화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쌍무적인 통화스왑협정의 형태로 시작하여 다자적 통화스왑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금융적 지역주의의 단계

	유동성지원	거시경제정책 조화	공동환율정책	공동통화· 지역중앙은행	초국적기구	무역 자유화
지역통화스왑협정	○	-	-	-	-	FTA 이전
지역유동성기금	○	○	-	-	-	FTA 이전
지역통화제도	○	○	○	-	-	FTA
지역통화동맹	○	○	○	○	-	관세동맹
완전한 경제통합	○	○	○	○	○	공동시장 이후

자료: 필자작성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속에서도 다극체제의 지역주의 경향을 피할 수 없다면 이러한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가 취하고 있는 과정은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과 유럽의 영향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독자적인 경제블럭화로 진전될 필요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되는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의 방향과 관련된다. 이미 전 장에서 확인 하였고 <표 5>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통화스왑협정, 지역유동성기금, 지역통화제도, 지역통화동맹 및 완전한 경제통합의 단계로 이행하는 금융적 지역주의의 전개과정에 있어 동아시아는 단기적으로는 지역통화스왑협정과 지역유동성기금의 구성과 운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외환위기를 예방하거나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고 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유동성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충한 다음 단계로는 지역통화제도와 지역통화동맹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가 순조로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 달러화를 비롯한 역외통화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역내 통화간의 환율변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특수한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가간 이해와 협력구도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는 어디까지나 실물적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금융적 지역주의가 전개되는 전체구도 속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¹⁸⁾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와 경제통합의 조류가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다고 전망될 때 한국경제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입장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금융적 지역주의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국 구상은 동북아 경제통합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방향과 밀접한 연관 하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쌍무적인 차원의 FTA 논의와 통화스왑협정 등에 대한 논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하여 한국경제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를 시급히 ASEAN+3 차원으로 확대하여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금융적 통합이 확대되고 ASEAN+3, FTA 등의 역내무역자유화가 추진될 경우에 대비한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경제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대를 주도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대에 조응하는 국내경제정책과 지역 차원에서의 발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국내경제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주의 시대가 아니고 일국적 차원에서의 국가주의시대의 패러다임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주의 시대가 전개될 경우에는 부조응(mismatching)의 비용이 예상된다. 동아시아가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 발전단계를 걸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과 국가차원에서의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⁹⁾

셋째, 대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18) 이러한 주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통화협력체제가 아시아통화제도(AMS)와 같은 환율협력 방안인가 아니면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유동성기금인가 하는 논의의 타당성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통화동맹(AMU)과 같은 궁극적인 통화협력체제는 현실적인 여건 상 무리라고 단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태론적 관점에서 있으면서 동태적인 단계론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출발선을 떠난 동아시아의 금융적 지역주의는 고유한 특수성 속에서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19)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FTA나 관세동맹 등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금융중심지는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이 이뤄지기 이전에도 정부가 의지한다면 관련법규와 제도정비 및 금융개혁 등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금융이 세계경제와 동아시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한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가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가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이만우, 2003).

필요가 있다. 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주도국가가 부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특히 일본이 유지하여 왔던 세력과 중국의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잠재력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동아시아의 리더십은 공백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국의 경제규모나 가용외환보유액 등만을 기준으로 주도국을 선정하는 것이나, 역내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의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경제의 통합을 포기하는 것 등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간극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안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입장과 전술한 국내정책이 정비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중개적 역할을 행사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주도국가의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방안으로 한국의 제안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집단적 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ASEAN과 한·중·일 3개국이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협의체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이 공식기구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주체로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대응방안을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주의의 논의와 운영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적 적 접근과 국내 인프라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문화정착 등의 노력이 결합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중심국의 실현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의 논의를 전통적인 무역주도의 경제통합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것은 전통적인 Bela Balassa의 경제통합 단계론이 제시된 1960년대는 주로 무역에 의한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 및 국가간 자본투자 등이 지역내 통합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신지역주의의 추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Balassa의 이론을 금융적 지역주의의 특성을 반영하여 1단계 지역통화스왑협정, 2단계 지역유동성기금, 3단계 지역통화제도, 4단계 지역통화동맹, 5단계 완전한 경제통합이라는 5단계론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이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금융적 지역주의에 대한 제논의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1997년 외환위기가 지역협력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지역적 금융협력이 지역경제의

통합을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 절차를 밟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는 단기적으로는 지역통화스왑협정과 지역유동성기금의 구성과 운영에 주력함으로써 새로운 외환위기를 예방하거나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동성관리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화제도와 지역통화동맹 등을 지향하여 역내 국가간 환율변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 달러화를 비롯한 역외통화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자적인 통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국가적 대응논리를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내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대에 조응하는 경제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문우식(2002), "동아시아 역내 통화통합 추진방안", 경제정책연구
- 박석근(2003), "신지역주의와 동북아경제통합의 비교지역론적 접근", 한국국제통상무역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영철(1999),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방향", 아세아연구, 제101호
- 손병해(2002),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 이만우, "동북아 허브 '금융' 먼저", 한국일보, 2003.03.18
- 이재기·이요한(2001), 동아시아지역연구, 도서출판 두남
- 전승철(2003),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최근 논의와 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74호, 한국은행
- 조종화·김우진(2001), "동아시아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정책연구01-06, KIEP
- 조종화, "동아시아의 지역통화협력체 구상", 오늘의 세계경제 02-13, KIEP
- Balassa, B(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Holewood, Richard Irwin
- Bowles, P.(2002), "Regionalism and developme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es", in Breslin, S., Hughes, C. W., Phillips, N. & Rosamond, B.(eds), *New Regionalism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Breslin, S., 1999, "Decentral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Creation of Trans-National Economic Reg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SGR Working Paper*, No. 38
- Breslin, S., Higgott R. and Rosamond, B., 2002, "Reg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SGR Working Paper*, No. 107
- Corden, W. M.(1972), "Monetary Integration",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9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s, D.(2001),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and the Global Economy: A Asia Pacific Perspective", EARD, ADB
- Das, D.(2001), "Regionalism In A Globalizing World: An Asia-Pacific Perspective", *CSGR*

- Working Paper* No. 80.
- Dieter, H.(2000), "Monetary Regionalism: Regional Integration without Financial Crises", CSGR *Working Paper* no. 52/00, The University of Warwick
- Dieter, H. & Higgott, R.(2002), "Exploring alternative theories of economic regionalism: From trade to finance in Asian co-operation", CSGR *Working Paper* no. 89/02, The University of Warwick
- Fabella, R.(2002),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A Survey", ERD *Working paper* no.13, ADB
- Harris, S.(2002), "Asian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their response to the Asian economic crises: the regional and global implication" in Breslin, S., Hughes, C. W., Phillips, N. & Rosamond, B., *New Regionalism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Hefeker, C. & Nabor, A.(2002), "Yen or Yuan? China's Role in the Future of Asian Monetary Integration",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East-Asia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at the Hamburg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 Hix, S.(1999),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Basingstoke, Macmillan
- Hooper, V.(2002), "Is Currency Union in Asia Political Rhetoric or a Realistic Vision?", EFMA *conference paper*,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Katzensstein, P.(2002), "Regionalism and Asia" in Breslin, S., Hughes, C. W., Phillips, N. & Rosamond, B., *New Regionalism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Nasadurai, H., 2002, "Globalization and Economic Regionalism: A Survey and Critique of the Literature", CSGR *Working Paper*, No. 108
- Narine, S.(2000), "ASEAN and the Idea of Asian Monetary Fund: Institutional Uncertainty in the Asia Pacific", mimeo
- Ravenhill, J.(2000), "APEC adrift: Implication for economic region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The Pacific Review*, Vol.13 No.3, pp.421-451
- Rosamond, B.(2000),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Basingstoke, Macmillan
- Spindler, M., 2002, "New Regio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Global Order", CSGR *Working Paper*, No. 93
- Sussangkorn, C.(2000), "A Framework for Regional Monetary Stabilization", *NIRA Review*, Autumn 2000, pp.16-20
- Wallace, H. and Wallace W.(2000),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J.(2000), "The Role of the IMF: A Guide to the Reports", IIE, *Policy Briefs*, No.00-5
- Wiplosz(2001), "A Monetary Union in Asia? Some European Lessons", in David Gruen & John Simon(eds), *Future Directions for Monetary Policies in East Asia*, Reserve Bank of Australia, pp.124-155
- Yu Hyun-Seok, 2003, "Explaining the Emergence of New East Asian Regionalism: Beyond Power and Interest-Based Approach", *Asian Perspective*, Vol. 27, No. 1